아시아 에너지경제 時論

음주운전 불용납, 행동으로 보이라

벌써 연말이 다가왔다. 이른 송년회도 이달 하순이면 시작된다. 해마다 이맘때쯤 부각되는 이슈가 음주운전이다. 들뜬 기분에 '술 한잔 먹고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평화롭고 화목하던 한 가정의 행복을 별안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슴 아픈 뉴스가 올 연말에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럽다.

법조인의 길을 꿈꿨던 장래가 촉망되던 한 20대 병사가 휴가차 나온 길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유명 여배우 남편의 만취 운전으로 뮤지컬 연출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올여름 일어났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에 가깝다는 인식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3~2017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4천300여 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2천800여명이 숨졌고, 20만1천여명이 다쳤다. 매년 평균 6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적 성향도 지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자의 85%가 대답한 최근 한 조사 결과는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때가 됐음을 상당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한 번쯤은 봐 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 갈 수도 있었던 용납해서는 안 될 일탈적 행위에 대한 충격적 요법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도, 권력도 모두 잃고 패가망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감히 술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 지도층급 인사의 음주운전에 더 엄한 잣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충격과 경고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공동 참여하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법안 발의 뒤 불과 9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최근 일어나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소속당과 국회의 징계 논의 등 후속 조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실망이나 배신감,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에서 이뤄진 징계 79건 가운데 56건이 음주운전이었고, 음주운전 징계 대상의 대부분은 의원실의 보좌진이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 또한 국회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전하는 씁쓸한 소식이다. 이런 모습은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을 탓하고 섭섭해할 일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에 나서고 구체적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비서관이 나온다면 단호히 퇴출할 것임을 선언하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준다면 추락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지도층 인사, 힘 있는 기관의 본보기식 음주운전 근절 노력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야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보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독자 기고

하찮은 작은 불씨 하나라도 중요하게 다루자.

지난 초승달이 저 산 너머로 노래 부르며 따뜻한 푸른창공 청보리 수확을 기원하는 밤. 119 소방상황실에서 아파트 화재발생, 출동명령을 받고 신속하게 승차 후 방화복, 안전화, 방수모 및 공기호흡기 등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택·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모습을 쳐다보며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조리중 가스취급 부주의·전기제품 관리소홀·쓰레기 소각 부주의·논두렁 태우기·용접불티 부주의·촛불기도 등 안전불감증과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같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골다공증이나 몸조리 등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몸보신한다는 사골 곰탕을 조리하거나 목욕이나 이웃집에 마실을 가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장끼를 때우거나 가스레인지에 라면이나 커피를 끓여 먹기 위하여 주전자나 커피포트를 올려 났을 때 피곤에 지쳐 그 순간에 곤한 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이나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로 천만년 가꾸어온 일시 불로 우리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쾌한 산소 공급, 아름다운 장관, 우리들에게 무한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생명이며 보배이자 친구입니다. 이리하여 지금은 정보화, 첨단화, 간편화에 발맞춰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을 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때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참으로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그런 참상을 보지 안 했을 것이다.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수많은 재산을 간직하려면 전기규격품 사용, 노후전선 철저한 교체, 하나의 콘센트에 세 개 이상 플러그 꽂지 안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는 항상 뽑아두기, 어린이 불장난 주의, 가스 중간밸브 잠금 및 환기 등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여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구축한다. 각 차량이나 우리 집에 작은 소화기 하나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임명철 무안소방서 민원반장

화재경보기 설치하여 재산피해 감소 실천해야

가족 분화와 연령층의 고령화는 노인 요양시설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소방 관서에서 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무엇보다 초기 소화와 피난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최소한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이 설치되고, 화재 시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초기 대응으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인 관련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므로 설치된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노인 관련 시설 등 소방 대상물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법에는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신기석 광산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진압팀장

社 說

文대통령, 아세안·APEC서도 '평화 촉진자'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파푸아 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두 다자 정상회의 모두 역내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회의체지만 안보 현안도 의제로 다뤄지기도 하고 북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들과의 관계 격상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외교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북한 비핵화·평화 협상 무드에 역내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 협상 궤도에 난기류가 조성되는 만큼 그동안 고비 때마다 대화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온 문 대통령의 역량이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도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다자정상회의 순방길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차례로 가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 관련 국 정상급들과의 연쇄 회담은 안개가 낀 북미 협상 흐름을 가르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펜스 부통령은 아태지역 방문 출국길에 오르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 전선 재확인을 순방 목표로 내세웠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의 재천명이다. 제재 완화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이 반발할 공세적 태도이다. 한미는 비핵화로 가는 목표는 같지만,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접근법은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순방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재완화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북한 행동에 대한 유인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같으란 법은 없다. 다른 프로세스를 생각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는 두터운 신뢰가 동맹의 힘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한반도 정세가 평화 무드로 바뀌는 과정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이다. 삐거덕대던 북미 협상을 남북관계의 진전이 다시 순항하게 하였고, 북미 회담이 또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선순환 흐름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정상회담까지 세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평가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행동 계획을 근거로 한미 간 조율된 대북 협상 전략이 작동하도록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한 후 미국은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고도화하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그림을 북한에 보여주지 않은 채 압박 일변도로 가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쌓은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모두가 원치 않은 일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비핵화·평화 흐름을 추동시키는 쪽으로 중국이 움직이도록 하는 외교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에너지경제 www.asiaee.net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 8차 1403호

회 장 김 경 | 대표전화 (02)868-4190 | FAX (02)852-9717
발행인 전광선 | 광고 (02)868-4190 |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인·사장 이승범 | 등록번호 서울, 다11042 |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직무대리 제갈대종 | 광주지사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시아에너지경제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asiaee4190@naver.com 전화 (02) 868-419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